

제3차 통일비저닝포럼



"통일한국사회의 인구와 젠더"

- 최지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통일전후 남북한 인구문제의 현황과 전망"
-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관점의 통일준비와 평화통일여성사회협약"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3시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토론자

-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비저닝 포럼

통일 전후 남북한 인구문제의 현황과 전망

2016.11.14

최지영

BO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한국은행

KOREAN UNIFICATION AND DEMOGRAPHIC ISSUE

- 통일: 정치, 경제, 사회 통합
- 인구이슈
 - 통일 이후 인구이동, 임금, 실업률, 출산율, 부양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
 - 또한, 통일비용 규모 및 성장잠재력에 영향

KOREAN UNIFICATION AND DEMOGRAPHIC ISSUE

- 기존의 접근
 -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의 인구이동 문제 : 통일 이후 북한 인구 이주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 북한 인구통계와 관련된 특정 이슈에 집중
 - 식량난 기간 아사자 수, 조선인민군 규모 등
 - 인구고령화 이슈, 출산율 변화 등에 대한 연구 부재

주요 발표 내용

-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최지영, 2014)
 - 통일 전후 북한 인구구조, 남북한 인구구조
 - 통일이란 인구 문제의 측면에서 기회 or 도전?
-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
 - 출산율,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등 최근 북한 인구 현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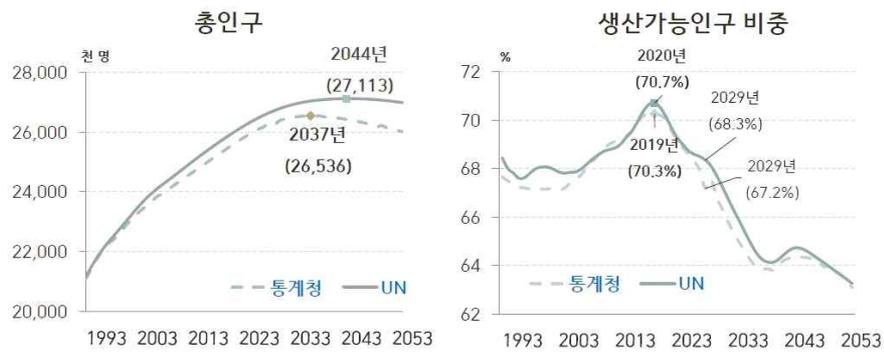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이용자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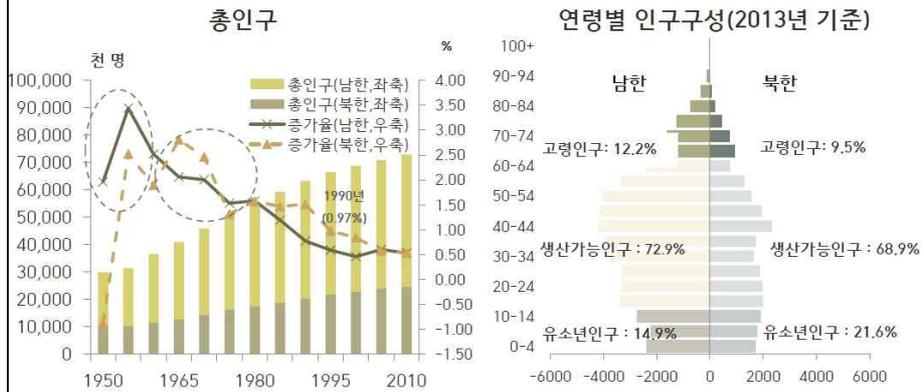
- 북한 인구통계의 종류
 - 공민등록통계(등록통계) → 북한
 - 인구센서스(1993년, 2008년) → 유엔인구기금, 조선중앙통계국
 - 통계청: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1993~2055년 인구추정, 추계
 - 유엔: 공민등록통계와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1950~2100년 인구 추정, 추계(UN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최근 발표된 유엔인구기금의 조사자료(2018년 센서스 준비)

→ 본 연구는 유엔세계인구전망(2012개정판) 토대로 북한, 아시아개도국, 남한의 인구구조를 비교

통계청 VS. 유엔 자료 비교(1993~20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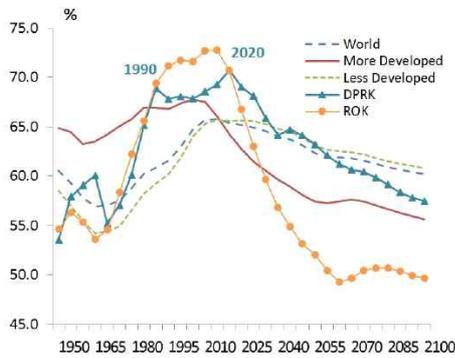


남북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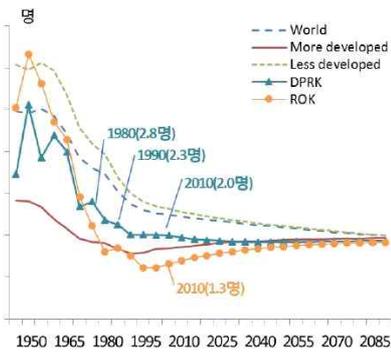
남북한 비교

생산가능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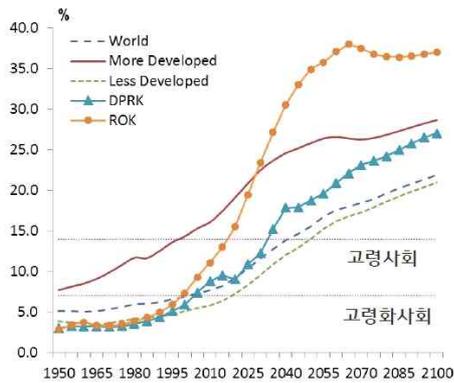


주: 2010년 이후는 중위출산율을 가정한 예상치임
자료: UN

합계출산율



남북한 비교



주: 2010년 이후는 중위출산율을 가정한 예상치임
자료: UN

고령화 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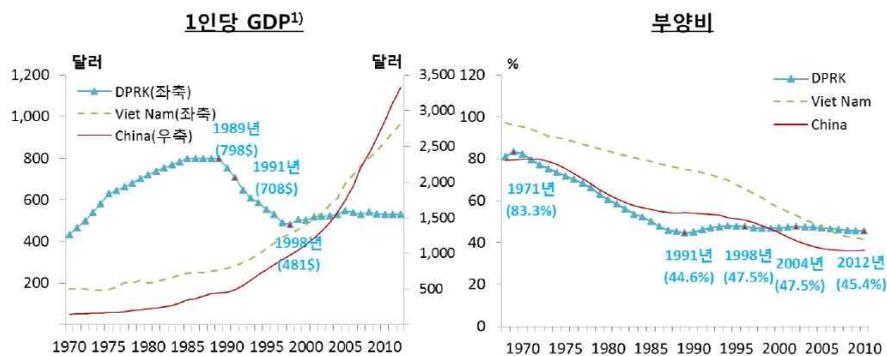
	시작년도		소요기간
	7%	14%	
저개발국	2050	2090	40년
개도국	2015	2040	24년
선진국	1950 이전	1995	45년 이상
남한	2000	2018	18년
북한	2004	2034	30년
남북한	2001	2022	21년

자료: 정선영(2013), UN

통일이전

- 북한의 체제전환
 - 경제성장 →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 통일비용 경감
- 성장전략
 - 일반적으로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 ex) 개성공단, 동북3성 인력수출
-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향유?
 - 북한 인구구조 변화추이 →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다른 체제전환국, 개도국에 비해 불리한 구조

북한 VS. 중국 · 베트남



주: 1) 2005년 미달러 기준 실질 GDP를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값임
자료: UN

인구보너스

- 1차 인구배당효과
 - 농촌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
 -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이 증가

북한 VS. 중국 · 베트남

1인당 소득과 생산가능인구와의 관계

- 1인당 GDP를 다음과 같이 분해

$$\frac{GDP}{POP} = \frac{GDP}{EMP} \times \frac{EMP}{WA_POP} \times \frac{WA_POP}{POP}$$

POP : 총인구, EMP: 취업자수, WA_POP: 생산가능인구

- 각 국의 인구배당효과 비교
 - 1992~2012년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증가율의 기여율

연평균 1인당 소득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1992~2012)

	China	Vietnam	North Korea
Per capita GDP [A]	9.51	5.99	-1.38
Labor productivity	9.27	5.11	-1.35
Employment ratio	-0.34	-0.13	0.00
WA pop ratio [B]	0.59	1.01	-0.03
Contribution rate of WA pop ratio [B/A]	6.19	16.90	1.92

Note: 1) average rate of growth
Sources: UN, WDI

Demographic Dividend Effect : Vietnam(16.9%)> China(6.2%)> NK(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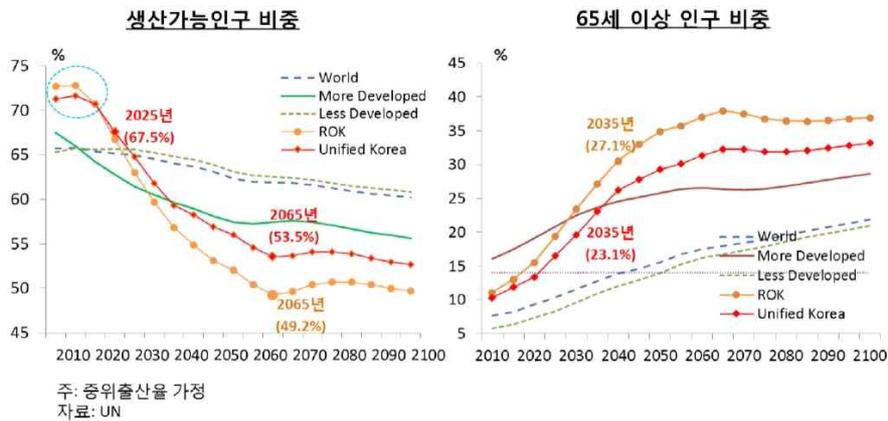
북한 VS. 중국 · 베트남

개혁 · 개방 전후 소득 및 인구구조 변화

		1인당 GDP ¹⁾	생산가능인구 비중
개혁·개방 진입시점	중국(1978년)	197달러	57.8%
	베트남(1986년)	250달러	55.7%
	북한(2002년)	519달러	68.0%
개혁·개방 진입 이후		1인당 GDP 성장률 ²⁾	생산가능인구비중 증가율 ²⁾
	중국(1978~1988년)	8.5%	1.0% [6.7%p 증가]
	베트남(1986~1996년)	4.3%	0.6% [3.3%p 증가]
	북한(2002~2012년)	0.2%	0.1% [0.6%p 증가]

주: 1) 2005년 미달러 기준, 2) 개혁·개방 이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3) []는 비중

남북한 인구통합시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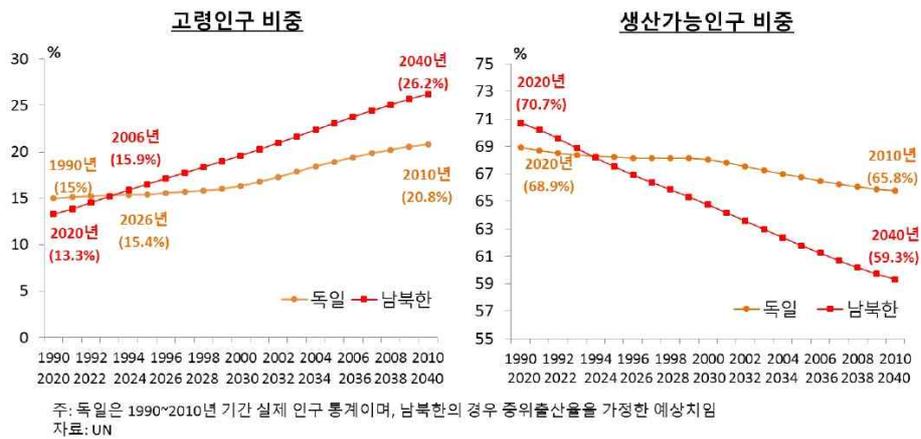
남북한 VS. 독일

총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조 비교

		독일(1990)	남북한		
			(1990)	(2015)	(2020)
총인구(백만명)		79.1	64.8	75.9	76.5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93.0	99.7	97.8 ¹⁾	97.7 ¹⁾
연령별 인구구성	0-14세 인구(%)	15.9	26.7	16.5	16.0
	15-64세 인구(%)	69.1	68.6	71.6	70.7
	65세 이상(%)	15.0	4.7	11.8	13.3

주: 1) 북한은 남한에 비해 성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북한과 남한의 성비는 2015년 기준 95.7과 98.9, 2020년 기준 95.8과 98.6임
자료: Eberstadt and Banister(1992b), UN

남북한 VS. 독일



남북한 VS. 독일



시사점

통일 이전

- 북한의 인구구조에서 높은 인구배당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부문간 노동이동을 촉진할 필요
 - 농업 부문의 고용 비중(35.6%)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으로 노동이동을 유도할 필요

통일 이후

- 통일 비용: 북한의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 문제
- 남북한 인구구조:
 - 출산율 충격에 대한 대비
 - 생산가능인구 구성에서 북한 지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2014년 조사의 특징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센서스

- 1993년, 2008년 두 차례 실시
- 2014년 조사는 2018년 북한인구센서스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가짐
- 전국의 모든 세대의 명단을 작성한 2013년 인구중간조사를 토대로 2014년에 추출한 13,250 표본가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를 포함

기간별 특징

- 1993~2008년
 -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의 충격이 반영
 - 비공식경제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합계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저하
- 2008~2014년
 - 식량난에서 회복되는 기간, 북중무역 확대
 -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기대수명은 1993년 수준으로 회복

도농별 인구증가율

	1993년		2008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수 (천명)	분포 (%)	인구수 (천명)	분포 (%)	인구수 (천명)	분포 (%)	1993- 2008 (%)	2008- 2014 (%)
도시	12,501	60.9	14,155	60.6	14,809	61.2	0.83	0.76
농촌	8,021	39.1	9,194	39.4	9,404	38.8	0.91	0.38
합계	20,522	100.0	23,350	100.0	24,214	100.0	0.86	0.61

주: 1) 2014년 조사<표 3.1, p.20>에 1993년 통계를 포함하여 저자 작성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도농별 합계출산율

	1993	2008	2014
북한 전체	2.13	2.00	1.89
도시	1.91	1.89	1.84
농촌	2.47	2.18	1.97
도농간 차이	0.56	0.29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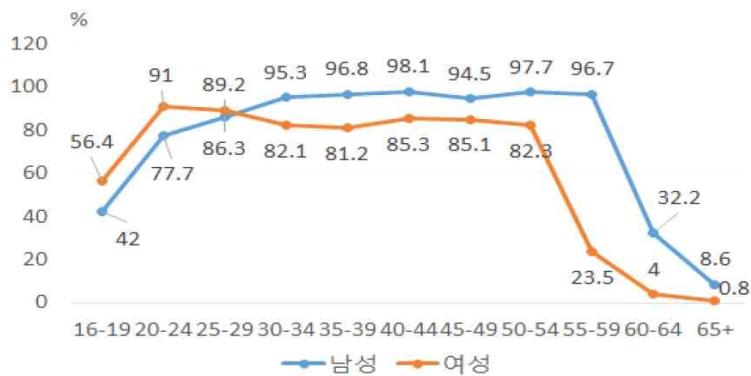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1993, 2008), DPRK CB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2014)

기대수명

	1993	2008	2014
남자	68.4	65.6	68.2
여자	76.8	72.7	75.6
전체	73.2	69.3	72.1

출처: DPRK CB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2014)<Table. 7.3>, p.100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젠더 관점의 통일준비와 평화통일여성사회협약¹⁾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 젠더 관점의 통일준비 필요성

통일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젠더(gender) 관점에서의 통일준비전략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통일은 체제나 제도의 통합을 넘어선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서 각 체제 내에 살아온 사람과 사람, 즉 그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문화의 결합을 위한 통일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체제나 제도의 통합만을 지향하는 통일준비로는 통일 이후 발생하게 될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에서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욕구 그리고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내적 통합을 위한 통일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일은 중성의 혹은 무성의 사람과 사람의 내적 통합이 아니다. 남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다. 남북한 사회에 만연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누구나 인정하는 통일의 당위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은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을 강조하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이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통일한국사회에서 성별 불평등구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것

1)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간행)] 중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인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젠더관점에서의 통일준비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젠더 관점에서의 통일준비전략은 크게 4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통일한국의 여성권익향상 및 대표성관련 법제도의 준비, 둘째 정부차원의 통일관련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셋째 양성평등한 통일한국의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성차별적 및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치관의 해소, 넷째, 여성들의 통일의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정부차원의 준비가 중요한 데 반해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정부보다도 여성시민사회의 노력과 참여 그리고 주도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의식의 부족은 관련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승중, 1996). 즉 통일의식의 부족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 보다는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동료집단간의 통일에 대한 담론과 실천적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과 동료집단과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 행동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여성시민사회가 주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적 가치와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 및 합의로서 젠더 관점에서의 통일준비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 및 실천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며 둘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과정은 소통과 협의, 타협, 화해 및 협력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촉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기존 통일운동과 통일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및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과 반성을 통한 ‘새로운’ 즉 ‘양성 평등적’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젠더관점에서의 통일준비전략으로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통일문제와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관계 맺기를 통해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적 통일담론의 형성을 통하여 통일 전과 후

의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성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여성적 가치로 일컬어지는 소통과 관계 맺기, 타협, 화해 및 협력을 통한 사회협약의 추진은 통일 및 대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개념과 목표 및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2.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의미²⁾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여성시민사회가 주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여성적 가치와 젠더 관점에 입각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 및 합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약의 추진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확산과 더불어 양성평등적 통일담론 형성 그리고 남남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소통과 협의, 타협과 합의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문제에 관한 공론 형성의 장이자 합의된 공론의 실천을 촉진하는 협력의 틀이라 할 수 있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의제, 환경, 참여주체, 협약의 성격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이수연외, 2015).

첫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의제는 기존의 사회협약들의 주요의제였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인 대북 및 통일 문제이다. 여성과 여성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대북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고 여성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을 추진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 즉 갈등 및 위기는 분단이후 장기간 누적되고 증폭되어 온 양극화된 갈등이다. 기존의

2)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의미는 2015년에 연구된 「평화통일실현 여성사회협약연구(이수연외)」에서 정의한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의 개념관련 부분을 발췌 정리하였다.

사회협약은 대부분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위기라는 급격한 환경요인의 발생 및 변화가 사회협약을 추동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협약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추진되었다. 반면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에서 다루는 갈등은 급격한 변화와 같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협약과는 다르다.

셋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참여주체는 여성개인과 여성시민사회이다. 기존의 사회협약은 단일하고 강력한 그리고 대표성이 높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그리고 정당과 같은 주체들을 전제로 한다. 반면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주도적인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여성단체는 여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단일하고 강력한 집단으로서의 대표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참여주체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넷째,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이익(interest)조정 수단이라 아니라 가치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증진의 수단이다. 기존의 사회협약은 노·사·정 3자에 의한 이익의 조정이나 갈등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대북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공론형성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은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통일의식제고와 생활 속 실천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소통-협의-타협 및 합의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상호 대립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삶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통일문제를 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여성들의 통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계층,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범주의 여성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양극화된 통일논의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수연외, 2015).

3.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비전과 목표³⁾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이 지향하는 미래상 즉 비전은 “여성이 주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평화통일운동”이다. 이러한 비전은 양성 평등과 여성적 가치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가치는 양성 평등, 여성적 가치, 평화 등 3가지이다. 첫째는 양성 평등 가치의 구현이다. 여성이 주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통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여성의 통일운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동질성 회복이다. 민족동질성은 지난 70년 동안 다른 체제와 이념에 의해 달라진 남북주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명분으로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나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민족동질성의 회복이 곧 전통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의 회복에 대한 요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유교적 윤리와 가치관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하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양성평등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명분으로 제시되는 민족동질성의 추구가 통일 전과 후의 한국사회에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를 재생산하거나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동질성 통일담론을 넘어서는 양성 평등적인 통일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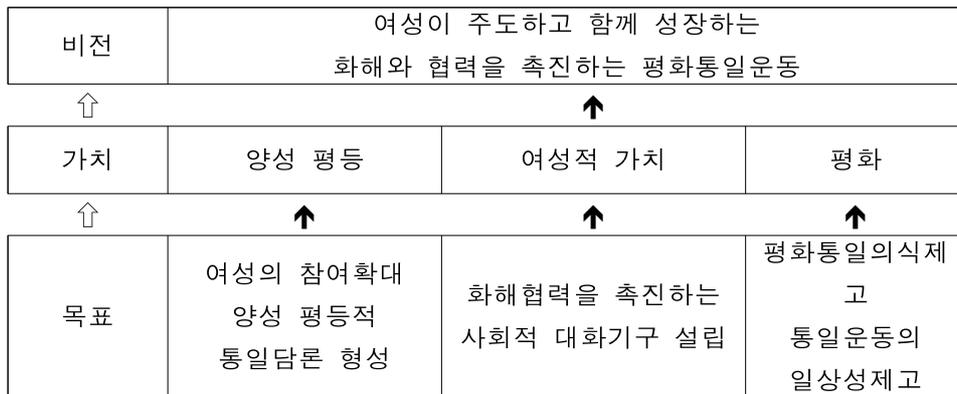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민족동질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여성들의 경험

3)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비전과 목표는 남한여성 및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워크숍의 결과(IV. 평화통일 여성협약을 위한 실천과제 개발을 참조할 것)와 2015년에 연구된 「평화통일실현 여성사회협약연구(이수연외)」의 철학과 원칙 및 목표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과 가치가 삭제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통일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문화적 체제적 이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각각의 체제와 문화를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질화된 부분의 동질화를 추구해야 한다(이수연외, 2015).

즉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이 양성 평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양성 평등적 통일담론과 명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위해 정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 1>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비전 및 목표



둘째는 여성적 가치의 실현이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을 통하여 새로운 여성 통일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여성적 가치의 실현을 담았다. 여성들은 독특한 보살핌의 윤리와 소통의 능력 그리고 높은 평화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여성적 가치라 할 수 있다(이수연외, 2015). 물론 여성주의자나 여성운동 내에는 여성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여성적 가

치라는 용어에 의해서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분업이 정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과 같은 삶의 방식들은 여성적 가치라고 호명되는 특성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돌봄과 소통, 평화감수성 등과 같은 여성적 가치는 생물학적인 남성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여성적 가치의 기원은 여성들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도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에서 이러한 여성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하는 이유는 사람들 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보살핌의 윤리는 배려와 관용을 낳고 소통의 능력은 대화와 화해를 촉진하고 평화감수성은 일체의 폭력에 대해 저항하게 한다. 이러한 여성적 가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적 가치의 접목은 갈등의 중재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연외, 2015).

여성적 가치에 기초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은 통일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적인 통일운동에 배려와 관용, 소통의 가치를 불어넣어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적 가치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대립적인 인식 및 집단 간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이 여성적 가치 즉 화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즉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 포럼이나 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소통-협치-타협-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의 실천을 위해 협력하는 집단 경험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평화이다. 냉전체제가 해소된 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 도발과 위협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화이다. 평화는 남북한 주민

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배려와 관용, 대화와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통일준비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세계사적으로 비평화시 즉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최대의 희생자는 여성과 아동이었다(정현백, 2003). 이들의 희생은 전쟁과 폭력이 자행되는 기간만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성과 아동은 최악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이수연, 2015). 전쟁과 폭력이라는 최악의 삶의 조건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부재거나 희생된 남성들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생계도 돌보아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통일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지향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분단관리를 의미할 뿐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통일은 분단국가로서의 당위이며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지향성은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숙원이자 시대정신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이나 분단관리냐가 아니라 통일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분단에 대한 익숙함을 낳게 되었고 분단이 더 이상 개인의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분단 상황에 대한 변경 즉 통일이 불편함을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단구조의 정상성 혹은 익숙함에서 비롯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이다(통일연구원, 2015).

따라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지향성을 지속 및 제고시켜야 한다. 평화통일은 민족의 숙원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21세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동력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필요성

가. 사회협약기반 여성 통일운동의 추진

일반적 의미의 사회협약(social pact)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정 삼자간의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다. 즉 사회협약은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집단과 노동자 단체 그리고 정부 간의 정책협외와 타협을 통한 제도화된 동의 및 합의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경제문제이외에도 사회적 양극화문제, 저출산·고령화문제, 부패문제, 사회적 차별과 편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협약들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하는 주체들도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민간기업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양한 결합방식으로 사회협약들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협약은 이익과 가치와 권력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과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그 유용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련주체들의 참여(participation) 및 협의(consultation), 타협(compromise), 타협을 통한 합의(consensus) 그리고 합의된 내용의 집행을 위한 협력(cooperation)의 과정에 있다. 즉 사회협약은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 혹은 주체들 간 대화와 소통(communication)의 활성화와 더불어 화해와 조정(conciliation), 양보에 의한 타협(compromise) 그리고 집행상의 협력(cooperation)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갈등적인 이익과 이해를 조정하고 양보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분노와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들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은 갈등의 해결자로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자기결정에 의한 갈등해결이라는 과정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적인 경험은 사회적 주체들 간의 ‘신뢰’라는 정신적 자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사회협약에 기반한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남북분단은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갈등구조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에 투영되어 남남갈등구조를 조장하였다. 남남갈등은 남북관계, 또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구조로서 남북문제와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의 다양한 국내외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생산되고 있다(조한범, 2007). 즉 남남갈등은 통일 및 대북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조장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남남갈등과 통일 및 대북정책의 정쟁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대북 및 통일정책논의가 극단적인 견해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 시민사회차원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조한범, 2013).

통일은 체제통합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내적 통합의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집단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단경험은 새로운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협약은 배제와 분리, 단절이 아닌 대화와 협의, 양보와 타협, 합의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협약을 기반으로 한 통일운동과 통일논의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갈등적인 이슈인 대북 및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의 추진은 상호 상반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이전의 사회협약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내적 통합의 집단적 경험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협약 기반의 통일운동에서는 여성과 여성시민사회의 주도성이 요구된다. 첫째, 남남갈등과 같이 양극화된 갈등구조는 ‘여성적 가치’로 호명되는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평화적 관점과 갈등 중재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교회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운동, 반전반핵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남북여성교류, 평화교육 및 평화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평화운동을

추진해왔다(김엘리, 2002:3).

이처럼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데에는 여성들만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여성적 가치 혹은 여성성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⁴⁾ 자녀출산과 양육 등과 같은 여성의 모성적 삶의 방식은 돌봄과 배려에 기초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돌봄과 배려의 생활방식은 다름에 대한 존중과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과 관계지향적인 가치들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성적 사고와 돌봄의 윤리는 배려와 관용을 촉진하고 전쟁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다지는 자양분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참여가 절실한 것이다(이수연외 2015).

둘째, 통일은 중성의 사람과 사람의 내적 통합이 아니다. 통일은 남북한에서 사는 남성과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다. 남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 중심적 및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한반도의 분단이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통일이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여성의 삶의 조건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은 여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의 성별 불평등구조가 악화될 수도 혹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명분은 남북한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속에 내재해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전통과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김은주, 2015a).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성과 여성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회협약 기반의 통일운동과 통일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남남갈등의 깊

4) 물론 이러한 여성적 가치나 특성들은 페미니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만 고유한 것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박수선 2006).

이와 범위 못지않게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무관심 또한 적지 않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은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과 통일에 대한 관계 맺기를 촉진하는 과정이자 결과로써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담론 보다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여성시민사회가 사회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이전의 남남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양성 평등한 통일국가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 통일담론에서의 젠더관점의 통합

통일담론은 통일의 방식과 내용, 논의와 실천의 주체에 대한 것을 포괄하며, 한국 사회 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입장을 의미한다(조영주, 2012). 통일담론은 정부정책 및 통일운동의 추진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권력구조와 자원 및 가치의 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먼저 역대 정부정책 차원에서의 통일담론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 근거한 비판들을 살펴보았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여성이 주도하고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1) 통일담론의 의미와 변화

통일담론이란 통일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철학의 총체로서, 통일에 대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배경이다. 통일담론은 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명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 등으로 구성된다(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통일명분 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1948년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담론의 변화를 통일담론 1.0, 통일담론 2.0, 통일담론 3.0 등과 같이 3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통일담론 1.0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장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 명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담론 2.0은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통일담론을 살피고 있다. 마지막 통일담론 3.0은 현 박근혜 정부의 통일담론을 의미한다(통일연구원 2015). 이 시대 구분은 앞선 시기의 통일담론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통일담론 1.0시기에서 북한은 한반도 이북을 점령한 불법적인 집단이었고 타협과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복의 대상이자 적대적 대상이었다.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기 보다는 괴뢰집단으로 명명하고 하나의 민족에서 분리된 이적 집단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의 북부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공산주의자들을 퇴출하고 북한을 남한체제로 편입시키는 실지회복이었다. 그리고 통일의 명분은 민족의 재결합을 의미했다. 이러한 통일담론에 근거한 통일정책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통일담론 2.0시기에서는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이 쉽게 다가오지 않음을 인식하는 단계였다. 또한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던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한 시기였다. 북한은 동유럽을 비롯한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북핵’이 등장하게 된 시기였다. 이는 남북한의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 문제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통일담론 2.0시기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괴뢰집단에서 동반자적 협상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88년 7.7 공동선언과 1991년 UN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으로 공표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으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반한 흡수통일로 달라지지 않았다. 통일의 명분은 민족의 화해와 민족공동체 건설이었고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전면내세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정책은 안보정책과 북한변화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통일담론 2.0은 노태우 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과 ‘남북 기본합의서’,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 등이 있다. 이러한 통일론은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담론 3.0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통일이 국가 정책적 목표로 등장하였고 국민들은 통일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정책위주의 통일정책이 통일외교정책 및 통일준비정책으로 확장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협력과 압박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제안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행동에 따른 수동적 반응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담론 2.0을 계승하여 국가 간의 통합으로 보고 있다. 통일의 명분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들고 있다(통일연구원, 2015).

역대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이 담고 있는 통일담론은 정부정책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통일관 및 대북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통일담론을 시기별로 구분하였지만, 이 3개의 통일담론들은 모두 현재형이다. 통일담론 3.0과 함께 통일담론 2.0과 1.0도 공존하기 때문에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은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특히 통일담론 1.0과 2.0에 내재해 있는 통일을 과정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통일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통일담론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통일을 둘러싼 담론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통일·대북정책, 이산가족 상봉문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한반도를 둘러싼 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박울민·조화순, 2013) 통일담론은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운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비판이 요구된다.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그동안 여성들은 평화운동 및 남북여성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평화주의 관점을 실천해왔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기존의 통일담론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기독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단체와 진보적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일운동 전개했다. 같은 해에 YWCA연합회 평화통일사업 실시했다. 1990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로 ‘조국통일위원회’를 조직하고 1993년 ‘평화통일위원회’로 개칭 이후 양한 평화운동 전개(정현백, 200b)하고 있다. 1991년 동경에서 남북여성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남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27차례의 남북여성교류가 이루어졌다(이수연외, 2015). 비정치적인 의제와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남북여성교류는 그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이 진행되면서 남북여성교류를 통해 이루어놓은 평화통일을 위한 성과들은 주류화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통일담론에서 평화주의 관점은 주변화 되었다.

두 번째 비판은 통일담론에서 민족/민족주의가 여성에 대한 성역할을 고정시키는데 있다. 특히 여성계 일부에서는 이산가족상봉에서 보여주는 가족이데올로기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성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가부장제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존재로 묶어 놓았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보다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감동을 주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의 기여는 제외되고 어머니와 딸로서만 등장하는 것이다(고정갑희 외 5인, 2000). 민족주의적 어머니 담론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성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학습시켰다. 여성은 민족주의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남북관계의 활성화 국면에서 빈번하게 재연된다. 민족국가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방식은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일운동내의 문화는 남성적·가부장적으로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정현백, 2000a).

세 번째는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의 재생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 남북한의 전통적 문화 속에는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가 녹아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동질성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면 불평등한 젠더질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국가에서 보장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성이 제한되어 있다(조영주, 2012). 특히, 북한의 가정생활에서는 성차별과 가부장제가 남한보다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탈북여성에 의하면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어머니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가정살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직업군에 있어서 간부들은 모두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은 하위직급에서 일한다고 증언하고 있다.⁵⁾ 이처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담론을 견지한다면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발생할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 문화의 간극을 쉽게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이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통일담론에서도 평화와 소통, 교류 등과 같은 여성적 가치가 배제되고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인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이 정당화되고 재생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운동 및 통일정책과정에 대한 여성과 여성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담론에서의 여성적 가치 및 여성주의가 주변화된 데에는 주류집단에 의한 배제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무관심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주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를 고취시키는 대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통일은 문화와 문화의 결합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통’이라는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성차별주의와 가부장제를 극복하고 여성친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5) 김은주(2015b),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장마당 세대의 생활과 의식」, pp.37-39

를 해소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조영주, 2012).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여성문제를 풀어 놓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진영은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성인 지적 관점과 양성평등 원칙이 담길 수 있도록 통일교육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다. 통일정책에서의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결의안 1325호는 전쟁 및 내전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평화유지 및 구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결의안으로 유엔회원국들은 국가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남북한 간에 정전협정을 맺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한국정부는 2014년 45번째로 국가행동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은 통일 분야에 관한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2014년 5월에 채택된 한국정부의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의 목적은 정부 부처들 간의 통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해서 분쟁예방,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은⁶⁾ 국가정책영역에서 평화·통일·외교 분야에 성주류화 정책 강화를 위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장려를 하는 한편 평화·통일·외교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아울러, 평화유지군(PKO) 파병 전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폭력을 예방하고, 현지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 증진과 여성에

6) <http://www.mofa.go.kr/> 외교부(2014.5.23 보도자료 발표), 2016. 9. 17 검색 정리하여 작성함.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인권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행동계획은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유엔1325결의안 이행 평가지표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및 회복(Relief and Recovery)이라는 4가지 분야에서 총 10개의 목표 및 목표별 세부 과제 28개로 구성하였다.

첫째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3개 목표, 12개 세부과제로 되었다(부록 참조). 1) 분쟁예방, 평화 활동 관련 종사자 인식제고를 위해서 국방부는 장병 및 군(공)무원 등에 대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성인지 교육 확대하고 PKO 파병 전 파병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하고 군부대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KOICA는 해외봉사단원에 대하여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관련 여가부와 교육부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인식제고 및 인권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분쟁예방, 평화 활동 및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위해서 국가비상계획에 여성보호 정책 및 성인지 관점 도입을 추진하고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 수립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와 국방·통일·외교 분야 예산 수립시 성인지 예산 확대·강화를 명시했다. 3) 국제협력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 연대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 사전 예방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 하에서 여성보호 및 여성의 평화활동 참여를 위한 UN 메커니즘 강화 노력 지속하고 KOICA는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성평등 교육 확대를 명기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고 비준 후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참여분야는 3개 목표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다. 4) 분쟁예방, 평화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분쟁예방과 해결 과정 및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여성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5) 평화·안보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양성평등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방·통일·외교 분야 의사결정과정과 여성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6) 분쟁지역 및 분쟁

취약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후원하기 위해서 분쟁지역 또는 민주화 과
도기 국가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대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양성평등 관
련 ODA 사업에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와 KOICA 연수 및 장학 프로그램에
여성참가자 참여 확대를 명시했다.

셋째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3개 목표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
다. 7) 분쟁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본군 성노예 제도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각종 기념사업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8) 여성, 아동·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방부는 군인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수립을 명시했다. 통일부는 성인지적 관점
이 반영된 탈북민 지원 정책 마련하고 법무부에는 국내 체류 여성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9)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역 성폭력 사건 가
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약취·유인죄 및 성범죄 관련 국
내법 엄정 적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호 및 회복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10) 외교부와 KOICA는
ODA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하고 ODA 사업 담
당자에 대한 젠더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분쟁지역 및 분쟁취약지
역에서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 추진하고 국제기
구의 성인지적 평화구축 사업 지속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은 효율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서 10
개 주요 목표별 28개의 세부 과제를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주관부처를 함
께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
최하고,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이 경과된 후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협
의를 거쳐 동 행동계획의 목표, 세부과제, 행동계획 전반을 재점검 및 보
완하도록 하였다(외교부, 2014).

따라서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의 추진은 유엔1325국가행동계획의 참여분
야에서 제안한 4번 목표와 5번 목표의 이행을 촉진한다. 평화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와 더불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를 촉진하고 통일관련 정책에서의 여성시민사회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하의 분단국에서 사는 여성과 여성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평화통일 여성사회협약은 그 자체로서 유엔1325 국가행동계획이 담고 있는 평화구축 및 유지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와 역할을 증대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에서의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5. 결 론

통일준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통일대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통일대비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하는 성격이 강하였다. 즉 통일준비에서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다가가는, 또는 통일을 만들어 가는 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준비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통일이 성사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여 물리적 통일을 넘어 내적 통일을 추진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준비에 있어서 젠더(gender)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은 사람과 삶의 이슈이며, 그 삶은 인구의 반을 구성하고 있는 남성과 또 다른 반을 구성하는 여성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가족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통일 이후의 삶과 상황 전개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통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과 태도는 통일의 과정과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양성평등한 통일한국이라는 비전이 통일 이전의 통일운동과 통일정책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부 정책전문가들만의 공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남한사회 여성전반에 걸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화통일여성사회협약을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매우 의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갑희 외 5인(2000), “탈분단시대의 가족과 여성.” 「여/성이론」,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김은주(2015a).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평화통일국민공감대 세미나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
- 김은주(2015b).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장마당 세대의 생활과 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김정수(2007). “거버넌스 패러다임과 사회협약의 모색”. 민관협력포럼자료집. 민관협력포럼 거버넌스센터.
- 이수연·장혜경·김원홍·최진희·김은주(2015). 「평화통일실천을 위한 여성협약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중(1996). “사회교육으로서의 시민공동체운동 추진모형”, 「사회와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전우택·윤석민·김은주 외(2014).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형성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현백(2000a). “통일운동과 여성주의.” 「창작과 비평」제28권 3호. 창작과 비평사.
- 정현백(2014). “국가와 여성평화 운동.” 「여성과 역사」. 한국여성사학회.
- 조민(2014).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확산- 통일의 새벽이 동터오는가.” 통일연구원.
- 조영주(2012). “통일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8권2호 (2012).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 조한범(2007). “민족공동체 형성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계의 역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위원회 토론회.
- 조한범(2013). “국민대통합과 통일기반 구축방안 모색”, 「국민통합의 완성, 남북통일의 길」국민통합 공감토론회, 국민대통합위원회.
- 통일연구원(2015).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제10차 KINU 통일포럼」.